

시·도민 하루 평균 28만명 오간다...이미 광역생활권

광주→전남 18.2만명...전남→광주 9.8만명

광주研, 이동통신 데이터로 6년간 흐름 분석

나주·담양·화순 등 광주와 인접 지역 교류 집중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28만명이 넘는 시·도민들이 광주·전남 지역을 오가며 사실상 하나의 광역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연구원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이동 현황을 분석

해 22일 '인포그래픽'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광주·전남 간 하루 평균 교류 인원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8만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22년 대비 3.1%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전남으로 이동한 인원은 하루 평균 18만2000명, 전남에서 광주로 유입된 인원은 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나주·화순·담양·장성 등 광주 인접

지역에서는 전체 방문자의 절반 이상이 광주 거주자로 나타났다. 광주 방문객 중에서도 약 절반이 전남 주민으로 조사됐다. 이는 행정 경계를 넘어 출퇴근과 여가, 생활 서비스가 공유되는 '광역 생활권'이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이동은 광주→전남의 경우 담양·나주·화순 순, 전남→광주의 경우 나주·화순·담양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시·군이 전체 이동의 75% 이상을 차지해 교류가 인접 지역에 집중되는 특징도 확

인됐다. 권역별로는 나주·담양 등 인접 7개 시·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에서 인접권으로 이동한 인원은 하루 10만 7000명(60.4%), 인접권에서 광주로 이동한 인원은 4만9000명(55.6%)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행정 통합 이전부터 두 지역 주민의 생활이 이미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는 광역버스 확대, 통합 환승체계

구축, 생활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이동 편의 중심의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송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루 28만명이 시·도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은 두 지역이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며 "광역버스 확충과 대중교통 통합, 생활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주민들이 통합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의장대 사열하는 한-베트남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백민**

전남·광주,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방향 제시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성료...기업·기관, 녹색산업 신기술 선보

전남·광주가 공동 개최한 기후환경 에너지 전시회가 기술 전시를 넘어 수출 상담 성과까지 끌어내며 에너지전환 산업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개최한 2026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이 22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과 녹색대전환 국제주간과 연계해 진행됐다. 전시에는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신기술, 스마트그리드 분야 71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131개 부스를 운영하며 최신 기술과 제품을 공개했다. 이동형 태양광 폐모듈 재자원화 장비와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제품 등 자원순환 기술이 소개됐고, 삼푸

·세계 리플스테이션 등 생활형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수출 성과도 이어졌다.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과 기업들은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GGHK) 연계 상담회를 통해 29개국 58명 해외 바이어와 1대1 상담을 진행했고 총 8건, 5억원 규모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일부 기업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기술 전시와 비즈니스 시민 참여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며 산업 교류와 판로 개척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여수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흐름과 맞물려 지역 기반 에너지전환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이연규 기자 gnnews1@

전남도, 앵커기업 유치 속도전...성과창출 집중

특별시 출범 앞두고 투자유치 체계 재정비

전남도가 앵커기업 중심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며 실질적 성과 창출에 나섰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4차 회의를 열고, 투자유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5일 첫 회의 이후 이어온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춘 전략을 재정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해

핵심 투자유치 과제를 직접 점검했다. 전략산업육성을 포함한 실국장 8명이 참석해 주요 기업별 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 접촉과 유치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산업 생태계 파급력이 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제안 전략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단순 접촉을 넘어 실제 투자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도록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접근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특별전담반 출범 이후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최근에는 실국장 중심의 기업 방문과 현장 상담, 맞춤형 제안 활동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기업과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투자협약과 생산시설 증설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관심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단계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약 70일을 앞둔 시점에서 투자유치 성과

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산업입지와 재생에너지, 전력·용수 등 강점을 기반으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특별전담반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앵커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해 통합특별시 산업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에너지, 첨단제조 등 미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과 청년 일자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22일 오전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서석대 표지석 앞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강기정 시장과 무등산 산행

김정숙 여사와 담양 소쇄원·화순 적벽 등도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광주를 찾아 무등산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 강기정 광주시장 내외와 함께 무등산 국립공원을 4시간 동안 산행했다. 원효사에서 출발, 중봉을 거쳐 천연기념물 제465호인 서석대까지 올랐으며, 서석대 표지석 앞에서는 김 여사와 기념사진도 찍었다. 등산을 마친 후에는 무등산 북쪽 자락에 있는 북구 충효동 명춘마을로 이동해 마을주민 10여명과 점심을 먹었다. 강 시장 내외는 경호차에 올라타는 문 전 대통령 내외에게 "또 광주에 와 달라"며 배웅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지난해 9월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공선수권대회 관람 이후 7개월 만이다.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전날에는 전남 담양군

소쇄원, 화순군 적벽관광지 문화유적 등을 관람했다. 소쇄원 조성자인 양산보의 15대 후손 양재혁씨(소쇄원재단 대표)의 초청으로 소쇄원을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전통 원림에 담긴 '무위자연'의 철학과 선비정신을 직접 체험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무위자연의 의미에 대한 해설을 청취하고 대숲에서 자생한 찻잎으로 만든 '죽로차'를 시음하며 옛 선비들의 삶과 사유를 깊이 있게 경험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1548년 김인후가 기록한 '소쇄원 48경' 가운데 하나인 '육주횡금'(玉漱橫琴)의 풍류가 재현돼 주목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방문 소감을 즉자에 남기는 '장원제방'에 참여해 소쇄원이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사유와 가치가 이어지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임을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1면 '땃밭 민주당'서 계속

시민개헌넷 "국힘은 지선 동시개헌에 동참하라"

개헌거부 입장 철회 촉구·개헌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열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22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개헌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개헌넷은 이날 회견에서 명분없이 헌법개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에게 개헌거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데 61%가 찬성했으며,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찬성이 더 높았다. 헌법개정안이 다음 달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목록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개헌넷은 "이미 개헌에 대한 시민

의 공감대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를 개헌을 미룰 명분이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권에서도 개헌 약속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있었다"며 "헌법 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헌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높고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만큼 국민의힘은 개헌거부를 철회하고 동시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의 상정 예정인 개헌안과 관련, 국민의힘에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당론을 풀어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맡겨 자유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39년 만에 하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이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시민사회는 지난 20일 광주시와 함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다는 마를 수 없는 과제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 즉각적인 개헌안 의결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기회가 눈앞에 왔다"며 "의인 10명 찾기를 하는 심정으로 (개헌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5·18정신헌법전문수령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령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과 함께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